

‘경제활력 대책’ 비수도권 거센 반발 왜?

노골적 수도권 팽창 ... 기업들 다 뺏긴다

완화 폭 너무 커 다양한 지방 혜택 무의미

군사시설 해제는 공장부지 확대로 이어져

정부가 11일 발표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무게를 댄으로써 비수도권의 경제 소외를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47개 핵심 과제에는 수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해왔던 다양한 규제 완화 사항이 포함됐지만 직간접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의 폭이 워낙 커 그 실효성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창업 법인에 대한 취득세 완화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향후 수도권에 대한 집중을 강화시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욱 벌일 것이라는 게 비수도권의 주장이다.

◇수도권 창업 법인 취득세 완화=지난 1973년 이후 35년간 묶여졌던 수도권 창업기업의 취득세율을 지방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호탄’으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법인과 신설된 지 5년 이내의 법인이 건물 등을 구입한 뒤 몰아왔던 취득세율을 현재 6%에서 지방과 같은

2%로 낮추기로 한 것.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해 내년부턴은 곧바로 지방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수출과 물류 등의 측면에서 지방 보다 여건이 우월한 수도권에 공장을 짓거나 창업하려고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취득세 완화는 기업투자를 수도권으로 몰리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같은 대폭적인 세금 인하는 지방에 이미 투자한 기업들이 추가 투자나 공장 증설시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를 옮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수도권 대규모 임대산업용지 공급=경기 북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함과 동시에 개발 및 관리 업무를 해당 지자체에 이양할 예정이어서 당장 수도권의 공장부지 공급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경기 부천·남양주 등 수도권에 조성되는 230만㎡의 대규모 임대산업용지도 수도권 집중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2017년까지 10년 동안 전국에 임대산업용지를 3천300만㎡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지만 수도권의 산업용지가 풍부해지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기존 수도권 규제로 충남 이남으로 수도권 공장들이 내려올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유치는 물건너 갔고, 이전 기업들이 되돌아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빠진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하반기 추가로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져, 2개팀을 가동해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해 뛰던 광주시가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5월 말에 1차 대책을 발표하고 6월 말에 2차 대책을 통해 수도권과 대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

할 계획을 세웠지만, 최근의 경제상황 변화와 미국 쇠퇴기 사태 등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는 상당 부분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기업환경개선 계획에는 지방에 대한 규제완화도 있으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과 폭이 폭발적인 수준이어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채희중·윤영기 기자 chae@



광주시가 무안국제공항의 명칭에 '광주'를 포함시키는 명칭 변경안을 추진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안 국제공항에서 이륙 중인 항공기.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무안공항 이름 바뀔까

광주시와 지역 경제계가 무안 국제공항의 이름을 '광주·무안 공항'으로 바꾸자는 안을 정부에 제안,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 등 4개 경제 관련 단체들과 함께 무안 국제공항의 명칭을 '광주·무안 공항'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광주공항 활성화 지원 요청 건의문'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핵심은 무안공항의 주 이용객이 광주 시민들이란 점을 고려하고 양 광주·전남도가 상생발전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안공항의 명칭에 광주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이날 “무안공항의 명칭을 광주공항으로 하는 것이 공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승객 이용률을 올리는 데도 크게 유리하다”며 “공항 이름에 광주가 들어가면 광주시민들도 '우리 공항'으로 생각하고 더욱 이용하지 않겠느냐”고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광주공항으로 이름을 바꾸기 힘들다면 광주·무안 공항으로 부르는 것도 괜찮다”며 “이름이 광주공항으로 바뀌는

‘광주·무안 공항’되면 국내선 이전 가능

전남도 “즉흥적 발상” ... 무안 주민들도 반발

것을 전제로 KTX 완전개통 이후 국내선의 완전 이전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광주’가 국제공항의 이름에 포함될 경우 국제적인 홍보 효과는 물론 비엔날레, 세계광엑스포 등 행사에 관람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일 이같은 입장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할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공은 일단 양시·도로 넘겨진 상황이다. 국토부는 “관련 지자체 간에 원만히 합의되어 공동으로 건의하는 경우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무안공항이 자리한 무안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공항명칭 변경 문제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일상 무안군 위원장은 “광주공항의 국제선 이전을 반대하고, 공항 건설에도 방관하다시피 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공항 이름을 바꾸려 한다”며 “변경희원 전체가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운동에 동참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와 사전 협의나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나온 사안으로 보인다”며 “공식적으로 우리 측에 제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로하고 입장을 밝히기도 난감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쇠고기 수입 허가제로 갈수도”

외교부 “재협상은 불가능” 재확인

외교통상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11일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협의를 위한 보충적 명확화를 뜻한다”며 지난 4월18일 타결된 협상내용을 일부라도 수정하는 형태의 재협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한·미간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협상이 있은 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간 서신교환처럼 기존 합의의 이행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해 확인하는 형태의 조치는 가능하다고 안 조정관은 설명했다.

쇠고기 수입업체들을 중심으로

로 제기되고 있는 쇠고기 수입 신고제의 허가제 전환 문제에 대해 그는 “아직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정상 최혜국 대우나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제한 등을 봤을 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육류 수입업체 모임인 한국수입육협회(가칭)는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에 대한 업계 자율결의 발표를 잠정 보류한다고 11일 밝혔다.

협회의 관계자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교역 금지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협의중에 있는 만큼 미국측에서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때까지 자율결의를 미루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인은 모든걸 다 주었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생각해”

구티에레스 미 상무장관

칼로스 구티에레스 미 상무장관은 10일 쇠고기 협상 문제와 관련, “한국인들은 현재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우리(미국)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미 의회에 조속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를 촉구했다.

구티에레스 장관은 “한국 정부 관리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미국산) 쇠고기를 받아들였다”면서 “그들은 막대한 정치적인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우리(미국) 의회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치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구티에레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미 의회가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면적인 수입 재개 방안을 하기 전에는 한미FTA 비준 동의를 표결을 할 수 없다는 입장

을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한국이 쇠고기 수입재개방을 결정한 만큼 의회가 나서 FTA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로이터 통신은 구티에레스 장관이 쇠고기 협상이 한국에서 전국적인 시위를 촉발시키고 이 대통령의 지지도를 추락하게 했지만 그것은 부시 행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면서 미국은 한국과 쇠고기 문제를 재협상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맥스 보커스 상원재무위원장은 이날 미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이 격양된 여론의 압력에 직면, 미국산 쇠고기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결과, “의회가 FTA를 통과시키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구티에레스 장관이 미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면적인 수입 재개 방안을 하기 전에는 한미FTA 비준 동의를 표결을 할 수 없다는 입장

/연합뉴스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00 / 010-722-0100

11255300-9999